

『부산문화 2030비전과 전략』의 가능성과 한계*

- infra 비전을 넘어 문화적 시민사회 비전으로 -

정 두 순**

| 목 차 |

- I. 서론
- II. 국내 문화개념과 문화정책
- III. 부산문화 2030비전과 전략
- IV. 결론 및 제언: infra 비전을 넘어 문화적 시민사회 비전으로

| 국문초록 |

이 연구는 2019년 7월 부산시가 발표한 『부산문화 2030비전과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그것의 가능성과 한계를 도출하고, 부산문화정책이 해야 하는 기본원리를 제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참여정부에서부터 현 문재인 정부에 이르는 각 정부의 문화개념과 문화정책을 살펴봄으로써 국가 권력기관인 정부의 문화개념이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좌우하는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는 지역

* 이 논문은 경성대학교 문화발전연구소가 주최한 제 13회 학술대회(2019년 10월 28일) <부산문화현장과 그 전망>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 경성대학교 글로벌문화학부 강사 / doosooni@empas.com

문화정책으로서의 『부산문화 2030비전과 전략』이 어떠한 문화개념을 바탕으로 구성된 정책인가는 물론, 부산의 미래를 어떤 방식으로 그려내는가를 밝히는 토대가 된다.

문화정책이 인간 삶을 위한 가장 긴급한 정책임을 표방한 참여정부를 부정하면서, 창조적 실용주의와 창조경제의 논리에 따라 문화정책을 자본축적의 도구로 삼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지난 10년간의 문화정책은 온 국민의 삶을 반문화적 시대로 옮겨놓았다. 이에 맞서 현 정부는 문화=자본으로 공식화된 그간의 한국적 문화개념을 문제시하며 사람이 있는 문화를 지향, 삶으로서의 문화이자 문화로서의 삶을 향한 혁신적 전환을 가능케 하는 문화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 문화정책과 현 시정에서 벗어나 부산만의 문화정책을 기획하며 탄생했다고 자평하는 『부산문화 2030비전과 전략』이 오히려 실패한 창조적 실용주의와 창조경제의 논리를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바니즘·전시행정·기념비주의에 매료된 부산시정부와 인프라확충을 문화로 인식하는 부산시민 사이에서 탄생한 『부산문화 2030비전과 전략』은 문화정책과 예술정책이, 도시정책과 문화정책이 혼재한 괴이한 정책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지역으로서의 부산, 부산성은 차치한 채 스펙터클한 거대 해양도시부산을 꿈꾸는 『부산문화 2030비전과 전략』은 부산시민은 없고 예술가만 남는, 부산시민은 없고 해양도시부산만 남는 미학화한 도시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 분석을 근거로 본 연구는 지역문화정책의 역할은 지역·사회와 지역·시민의 존립을 위한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있으며, 문화적 토대란 교환가치로서 작용할 문화적 인프라의 구축이 아닌 사용가치를 발휘할 문화와 그 생산을 위한 시민주체 형성에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아울러 지역문화정책은 지역예술(인)의 활성화 및 문화적 인프라의 건립이라는 강박을 넘어 부산시민이 처해 있는 노동시간, 최저임금, 기본소득 등과 같은 현실 문제를 진단·고려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지향하는 데로 나아가야 하며 이로써 내일의 문화적 시민사회를 여는 동력이 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주제어: 부산, 부산문화, 부산성, 문화정책, 시민, 문화적 시민사회

I. 서론

2019년 7월 11일, 부산시는 부산의 10년 후를 기획하며 하의상달로 완성된 부산문화정책, 『부산문화 2030비전과 전략』(이하 『2030비전』)을 발표했다. 현 정부가 『문화비전 2030』을 내놓은 지 14개월 후 발표된 이 정책은 정부문화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극대화하면서 부산이라는 지역적 특이성과 정체성을 담아낼 것인가 하는 난제를 안고 있었기에 그만큼 큰 기대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2014년 <다이빙 벨>의 상영을 두고 벌어진 논란과 그 여파로 부산국제영화제를 둘러싸고 진행된 일련의 사태를 목도한 부산시민은 중앙정부와 시정부의 문화에 대한 인식과 그것의 활용 방식에 따라 문화는 언제고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강력한 도구로 변질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이러한 부산시민의 경험이 그간 정치적 도구로 유린당한 문화를 되살리는, 자기 삶과 맞닿은 문화,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할 문화를 가꾸어나가는, 동력이 될 새로운 부산문화정책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연구는 『2030비전』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그것의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도출하고, 부산문화정책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사항들을 발굴·제언하는 목적을 지닌다. 주지하다시피 『2030비전』은 그 완성을 위해 현재 각계각층에서 고군분투하며 수많은 의견을 수렴, 보완하는 중에 있다. 이 연구는 미력이나마 부산문화정책에 보탬이 되길 희망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고자 한다.

첫째, 『2030비전』의 바탕이 되는 문화개념은 무엇인가?

둘째, 『2030비전』은 문화=자본을 넘어 사람=삶=문화를 추구하는가?

셋째, 『2030비전』은 부산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지향하는가?

넷째, 『2030비전』은 부산의 지역적 특이성·특수성, 부산문화의 다양성·복수성·중층성을 어떻게 보장·강화하는가?

다섯째, 『2030비전』이 그리는 부산, 부산사람, 부산문화의 내일은 어떤 모습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II장에서는 참여정부에서부터 현 정부에 이르는 각 정부의 문화개념과 문화정책을 비교·분석하고, 『2030비전』이 그 가운데 어떠한 논리를 따르는지를 진단한다. 문화를 경제와 동의어로 만든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삶 = 문화 = 권리를 실현하고자 한 노무현 정부, ‘사람이 있는 문화’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문화개념과 문화정책 사이에서 부산의 문화정책은 실패한 창조적 실용주의와 창조경제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가하는 우려를 표명한다.

III장에서는 『2030비전』을 4가지 차원, 즉 1. 예술정책·도시정책·문화정책이 뒤섞인 스펙터클한 정책 2. 시민보다 예술가를, 시민보다 도시를 위한 왜곡된 문화정책 3. 지역성과 부산성에 무관심한 중앙을 욕망하는 문화정책 4. 어바니즘, 전시행정, 기념비주의에 매료된 부산시 정부와 인프라확충을 문화로 인식하는 부산시민이 만든 건립 강박적 문화정책으로 분석·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의 근거는 『2030비전』이 그 토대를 사람이 아닌 도시로 삼은 역설에서 드러난다.

끝으로 IV장은 지역문화정책의 역할이 지역·사회와 지역·시민의 존립을 위한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있다는 주장과 함께 부산문화정책은 반드시 부산시민이 처해있는 현실문제를 진단·고려하는 데서 출발하여 부산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지향하는 데로 나아가야 하며, 내일의 문화적 시민사회는 여는 마중물이 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II. 국내 문화개념과 문화정책

1. 원리로서의 문화·창조적 실용주의·창조경제

문화의 중요성을 민주주의의 의제로 부각한 참여정부의 『창의한국』 이래, 문화를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고 문화의 산업화를 확대·강화·추진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품격 있는 문화 국가』·『문화융성』은 문화가 곧 돈(자본)이라는 자본주의(신자유주의, 글로벌자본주의) 문화개념을 확대·재생산했다.

참여정부는 예술과 문화유산 같은 특수 영역만 문화로 인식하던 기존의 ‘협의의 문화개념’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문화가 삶이라는 ‘광의의 문화개념’을 적극 수용하면서, 모든 것을 문화로 소급할 때 발생할 정책적 한계를 고려한 후 ‘원리로서의 문화개념’을 제시했다. 이 개념은 삶 곳곳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이 문화에 있다는 신념과 더불어 “경쟁중심주의적 세계관, 노동중심주의적 세계관과 구별되는 인간주의적 세계관”을 담고 있다.¹⁾ 이러한 문화개념을 토대로 한 『창의한국』은 “경제와 문화에 대한 이분법적 태도”를 지양하면서도 이해·공감·소통·상생을 통한 “인간 사이의 공동선(The Public Good)”을 추구하고, 경제와 동의어가 되어버린 발전의 의미를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자유가 향상되는 과정”²⁾으로 확장하면서는 문화를 경제발전을 위한 도구가 아닌 ‘자유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정책적 과정을 담아냈다.³⁾ 문화정책의 근거를 문화적 권리(자유권·사회권·환경권·인권)에서 찾은 『창의한국』은 문화정책이 인간 삶

1) 노명우, 『문화현장 제정과 문화정책의 과제』, 『문화과학』 46, 2006, 224쪽.

2) 데이비드 트로스비, 성제환 옮김, 『문화경제학』, 한울, 2004, 106쪽. 노명우, 위의 논문, 225쪽, 재인용.

3) 노명우, 위의 논문, 224쪽.

을 위한 가장 긴급한 정책 영역임을, 또한 문화개념이 한 국가의 문화정책뿐 아니라 사회발전 전략 및 국정운영의 기본원리까지 포괄하는 국가적 명운이 걸린 사안임을 공표한 하나의 사례였다.

국정철학을 ‘창조적 실용주의’에 둔 이명박 정부의 『품격 있는 문화국가』는 “추상적 가치보다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실질적 정책을 지향”하며 “선택과 집중, 사후지원, 간접지원, 문화산업, 문화향유기회 확대, 실용적 역할분담, 녹색성장, 콘텐츠 수출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했다.⁴⁾ “문화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전략”에 집중한 MB 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를 경쟁(력)으로 인식, 그 정책적 실행을 실용으로 구체화한 “문화신개발주의-산업정책”이라 정의할 수 있다.⁵⁾

경제부흥·국민행복·평화통일 기반구축과 함께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삼은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들보다 훨씬 세련됐지만 보다 손쉬운 방식으로 문화의 가치(문화융성=대박)를 부각하며 문화가 지닌 힘을 국가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당시 문화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이룰 핵심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책당국이 내놓는 자료마다 문화융성이 결국 광의의 문화개념을 바꾸어 표기한 것, 기존에 통용되는 문화·발전’ 개념을 그저 문화·융성’이라는 새로운 단어로 바꿔치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문화융성』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에 대한 무지를 은폐한 ‘시물라크르 문화정책’임이 드러났다.⁶⁾

-
- 4) 황설희, 「김영삼 정부 이후 한국의 문화정책이념에 관한 연구: 문화적 민주주의인가, 문화의 민주화인가?」, 『한국정책연구』 19-1, 2019, 71쪽. 원도연, 「이명박 정부 이후 문화정책의 변화와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연구 -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 평가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32, 2014, 236쪽.
- 5) 원도연, 위의 논문, 229쪽. 이동연, 「대안적 문화정책의 구상-새로운 패러다임은 가능한가」, 『문화연대 문화정책포럼 자료집』, 2012, 8쪽.
- 6) 문화융성 개념 혼란과 관련해서는 김정수, 「‘문화융성’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문화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인식했다는 점, 문화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를 병행하는 문화정책을 기획했다는 점에서 동일선상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 출발이 “빈곤한 철학” 위에서 있다는 데, 그리고 “개인들의 문화적 삶의 다양한 선택으로 기능할 수 있는 문화산업”은 차치한 채, 오직 “국가경쟁력의 전위”로 기획한 문화산업과 그 실행을 위한 제도들만 잔뜩 실어, “문화민족주의로 대변되는 국가주의”를 그 종착지로 삼아 나아갔다는 데 두 정부 문화정책의 심각성이 있다. 이는 참여정부가 『창의한국』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인간 삶을 위한 가장 긴급한 정책 영역으로서의 문화정책의 폐기를 넘어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민족과 국민을 경제공동체로 호명하는 수단으로서의 문화정책, “국정홍보와 국가주의 재생산”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국가자본주의 문화정책, 즉 신자유주의 문화정책이라는 괴물을 탄생시켰다는 것이다.⁷⁾

2. 품격 있는 문화국가·문화융성의 함정

MB 정부가 추진한 문화정책은 성과와 경쟁, 선택과 집중이라는 구호 아래 권위적 문화시장주의를 초래했다. 돈 되는 문화와 돈 안 되는 문화, 좌파문화와 우파문화를 구분하던 MB 정부의 비문화적 잣대는 문화공공성과 문화다양성의 침해뿐 아니라 문화생태계의 위기마저 초래했다. 지난 정부의 정책을 엄격하게 진단한 후 공은 계승하고 과는 개선하는 것이 정도(正度)일 텐데 MB 정부는 참여정부의 문화정책 대부분을 폐기하고, 자기 정부가 추구하는 보수적 정책을 입안했다.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로 이어지던 ‘팔길이 원칙’은 산산이 부서졌고, 문화산업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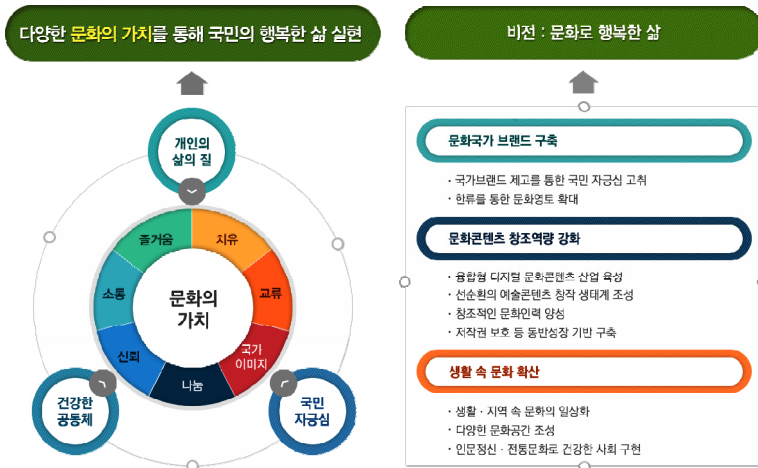
가정책연구』 30-3, 2016, 187쪽을 참고하기 바람.
7) 이동연, 앞의 논문, 2012, 10쪽.

기초 문화예술은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 극단적 양극화를 경험했다. 선택과 집중이 성과와 경쟁력에 의해 좌우된 것이라면 차라리 낫다. 예술의 순수성과 비정치성(좌파척결)을 강조하며, 한편으로는 공적자금으로 배분하던 지원금을 예술단체의 존립을 위협하거나 정체성을 거세하는 담보로 활용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적 성향의 단체와 인사들을” 전격 지원·기용함으로써 문화정책을 한낱 정치적·이념적·사적 수단, “통치의 편의”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했다.⁸⁾ 이러한 행위는 당시의 문화정책이 비문화적이라는 말만 갖고서는 분석할 수 없는 정치적·권력적·억압적·폭력적 정책이었음을 시사한다. 하물며 MB 정부의 4년간의 문화정책이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까지 노무현 지우기 정책으로 회자되는 것을 보면, 이는 MB 정부의 문화정책에 그 어떠한 도덕성이나 정당성도 부여할 수 없음에 대한 방증이라 할 것이다. MB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늘 입버릇처럼 한 말은 결국 자기 예언이 되었다. 문제는 MB에서 박근혜로 이어지는 10년 동안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그(들)만의 시간이 아니라 온 국민에게서 앗아간 10년간의 문화적 권리마저 포함한다는 것이다. 한 정부의 문화에 대한 무지, 정책적 무능 및 무책임에 대해, 문화를 통치의 편의를 위해 정치적·이념적·사적으로 사용할 때,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반문화적 시대와 공존할 수 있는지를 아주 똑똑히 보여준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한층 더 확대·강화된 문화의 산업화를 기획하며 문화융성을 실현할 문화정책을 내놓았다. 문화를 돈벌이와 이미지화의 수단 쥘므로 여기고 입안한 정책임은 은폐한 채, ‘문화는 국력이다’는 표어를 내걸고, 문화를 통한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면서 경제적 부흥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문화융성에 홀리듯 총동원된

8) 김평수, 『MB 정부의 문화정책 평가와 박근혜 정부의 정책 과제』, 『글로벌컬처의문화연구』 2, 2013, 21쪽.

국민들은 자신들이 무비판적으로 생산한 문화상품의 범람 속에서 지옥을 경험했다. 문화용성이 부패용성으로, 또 이른바 좌파문화인 척결을 위한 블랙리스트로 이어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문화에 대한 왜곡된 이해와 실천이 어떻게 한 국가와 온 국민을 수렁으로 밀어 넣는지를 분명하게 자각했다. 문화를 사적이익과 정치권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한 도구로 악용함으로써, 실패한 MB 정부의 문화정책을 거울로 삼기커녕 오히려 반복·확대·강화함으로써 『문화용성』은 문화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할 국가와 국민의 발목을 잡으며 시간을 거꾸로 돌려놓았다. 그런데도 10년의 경험이 만성질환이 된 탓인지, 문화에 대한 국내 인식은 민주주의적 삶보다 자본주의적 삶에 여전히 맞닿아 있다.



<그림 1> 박근혜정부 문화정책 방향과 비전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은 MB 정부 문화정책의 답습을 넘어, “이벤트 자본주의”와 “문화적 양적완화의 정치경제학”이라는 틀에서 구성된 “경제중심주의, 국민-국가 중심주의 강화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⁹⁾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대부분의 국민이 자기 창의력의 발산과 자유로운 개성의 발현만으로도 자기소유의 생산수단을 가질 수 있다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적 유혹은 마치 문화창조만이 자기뿐 아니라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신동력이라 믿게끔 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온 국민을 자기 및 국가 브랜드화를 향한 욕망, 자본축적 및 그것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총력전에 맹목적으로 뛰어들도록 이끌었다.¹⁰⁾ 문화가 생산수단의 자기소유화를 가능케 할 것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강령에는 비물질노동자들의 공동되거나 임금노동과 노동의 착취에서 벗어난 자유롭고 평등한 문화적 개인들의 연합을 오히려 국가자본주의, 신자유주의(글로벌자본주의)의 침병으로 전도시키는 마법이 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수에게는 문화와 노동이 융합하여 창조적인 문화적 노동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융합은 새로운 착취를 위한 노동, 창조적 노동의 외피를 쓴 최저임금 노동일뿐이다. 또한 노동이 물질적 생산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즉 ‘필요성의 영역’이 제대로 축적되지 못한 경우 ‘자유의 영역’은 소득 없는 궁핍과 기회 박탈의 삶이 될 가능성이 높다.¹¹⁾

9)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 업무보고』 <https://www.mcst.go.kr/kor/main.jsp>(검색일: 2019. 11. 8.) 와 김재기 외, 『지역문화어댑터 양성 프로그램 개발 제안』, 부산발전연구원, 24~30쪽 참고할 것.

10) “산업화를 통해 문화가 가치 생산의 수단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노동과 문화의 진정한 융합이라기보다는 문화의 타락, 자기 소외에 가깝고 즐거움, 여유 멋, 또는 그 자체로서의 가치의 면모를 잃은 문화에 해당한다. 돈이 되지 않는 것은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도 시장에서 외면을 받도록 하는 것이 문화산업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일자리 없는 성장’만 보여주는 신자유주의 국면에서 노동은 갈수록 희귀한 기회나 비정규직의 형태로 다가오고, 문화는 삶의 여유와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노동과 문화가 결합되는 방식은 다양할 것이다”(강내희, 『코뮌주의와 문화사회』, 『문화과학』 50, 2007, 66쪽).

11) 강내희, 위의 논문, 66쪽.

이것은 자본주의적 문화개념 속에 독특하게, 아니 모순적이라 해도 무방할 법한 방식으로 자리 잡은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현시대적 질문과 함께, 점점 자본축적의 높으로 빨려 들어가는 문화 및 그 생산주체를 어떻게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 에너지로 전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과제를 던진다. 그리고 이것은 현 시대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하는 숙제이기도 하다.

3. 문화비전 2030¹²⁾

신자유주의 하에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 실험하던 프리터¹³⁾가 자본의 발전을 돕는 역할로 전략하고, 개인의 욕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자본관계로 포섭되는지를 목도하면서, 한편으로는 공통적이고 집단적인 삶에 대한 욕망과 추구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하 자개연)’을 자본주의를 넘어설 대안으로 떠올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¹⁴⁾ 하지만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에 신자

12) 이 연구는 현 정부의 새예술정책 5개년 계획(2018~2022)은 다루지 않는다. 다만 『문화비전 2030』의 철학을 담아 예술정책이 완성되었다는 점, 문화(정책)의 한 영역에서 그러나 독립적·구체적으로 수립되었다는 점만 언급하고자 한다(문화체육관광부, 『새예술정책』을 참고하기 바람.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6696(검색일: 2019. 09. 21.).

13) 프리터의 독특한 삶을 향한 욕구와 형식이 새로운 삶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로 끝나버린 까닭은 신자유주의가 그러한 삶에 대한 실험을 자본에 대한 도전보다 자본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포섭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프리터로부터의 학습은, “오늘날 생산조건이 공통적인 한에서, 욕망하는 삶에 대한 추구도 **공통적이고 집단적인 때에만** 실질적으로 충족” 된다는 논의에 주목하도록 이끈다(조정환, 『인지자본주의』, 갈무리, 2011, 338~339쪽, 강조 원저).

14) 김수행에 따르면 노동착취와 임금노동이 사라지면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만 남게 되고 그들이 함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새로운 사회는 도래한다. 자개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노동하는 개인들이 생산수단을 공유하며 자신을 위한 노동이 가능하고 노동의 소외가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노동조건들(생산수단과 생활수단)과 노동력을 사회적 생산력으로 계획적으로 사용한다. △사적노동이 아닌 사회적 노동이 가능하다. △상품과 화폐, 자본이 사라진다. △모든 개인들이 해방되어 자유

자유주의는 너무나 강력하고, 그 극복을 위해 ‘공통되기’나 ‘자개연’을 이루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파편화됐고,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은 것을 갖길 갈망하게 됐다. 그럼에도 그 극복을 상상에 그치지 않고 가능케 할 힘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믿는 까닭은 신자유주의를 넘어설 문화와 그 생산주체인 우리가 품고 있을 역능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 역능은 자본주의의 논리를 넘어서는 문화생산을 향한 주체들의 실천에서 발현한다 할 것이다. 이것은 조정환에 따르면 다중지성이 전개할 “영구문화 혁명”과 “치유적 문화 혁명의 정치”로,¹⁵⁾ 강내희에 따르면 자개연이 전개할 ‘풍요로서의 문화사회’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¹⁶⁾ 그리고 이러한 미래사회의 토대는 다양한 층위의 사람이 다양한 층위의 시공간과 뒤엉켜 독특한 방식으로 형성하는 ‘삶-문화’의 사회적

롭고 평등하게 된다. △개인의 자유로운 발달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달의 조건이 된다.” <“마르크스가 말한 새 사회는 오지 않았다”, 김목협동조합 윌레 강좌, 김수행 교수의 ‘자본주의가 잉태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 2013년 6월 <http://www.ecumen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9878>(검색일: 2019. 09. 28.). 그밖에 강내희의 <노동거부와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 <https://vimeo.com/157978479>(검색일: 2019. 09. 28.) 등을 참고하십시오.

- 15) 조정환, 앞의 책, 2011, 85쪽, 501~502쪽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을 “착취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전화”하는 인지기본주의는 “영구문화 혁명”을 전개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문화혁명, 재특이화의 길로 나아가는 다중들이 지금까지의 성장경제의 진실을 직시하면서 그것이 가져온 트라우마를 스스로 돌보는 가운데 생성될 일종의 “치유적 전염 지대”를 확대하는 일에서 시작될 수 있다. 특이성들의 공통되기를 통해 활성화될 이 치유적 문화 혁명의 정치는 현재의 인지기본주의가 가져오는 공포, 불안, 우울의 정서들을 역전시키면서 개체적 집단적 기쁨을 산출하는 정치이다.
- 16) “가치=부가 지배하는 현실에서 사용가치=풍요가 지배하는 새로운 사회로서의 전환 운동”을 코핀주의라고 설명하는 강내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연 자원과 풍경, 역사적 유산, 예술, 시간, 능력, 친절, 사람 등 인간적 삶의 자원을 이루는 것이 모두 교환가치로 전환되어 자본축적의 수단이 될 것을 요구받지만, 코핀사회에서는 그런 자원들이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에 필요한 그대로 남아서 ‘사회적 생명’의 다양성을 구성”한다고 말한다. “코핀주의가 추구하는 사회”는 “문화사회”다. “코핀주의가 자본주의를 지양하여 만들 사회가 문화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문화적 활동이 중심이 된 삶을 통해 그 사회의 주체들이 다양한 주체적 역능을 강화하여 자본주의적 삶으로 회귀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갖추기 위함”이다(강내희, 앞의 논문, 2007, 68~72쪽).

생산으로 마련된다. 다시 말해서 삶으로서 문화이자 문화로서 삶을 향한 혁신적 전환 없이 새로운 문화사회의 도래는 요원하기만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현 정부의 『문화비전 2030』은 문화는 삶이라는 『창의한국』의 정신을 잇되, ‘문화 = 자본’으로 공식화된 그간의 한국적 문화개념, 즉 자본주의적 문화개념을 다시 사람과 삶으로 돌려세우려는 의지, 상품으로서의 문화를 대체한 ‘사람이 있는 문화’를 지향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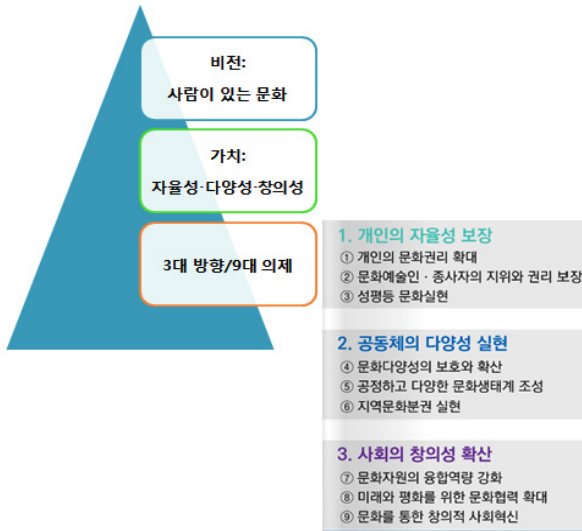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이듬해 5월, 1년 동안 야심차게 준비한 『문화비전 2030』을 발표했다. 이것은 그간 공식·비공식적으로 행정이 주도해 온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구체화 방식(top-down)과의 결별을 선언하며, 민간이 의제를 주도·구성, 정부가 제안된 정책의 구체화를 지원·완성하는 차별화 전략(bottom-up)을 통해 완성되었다.¹⁸⁾ “감시받지 않을 권리, 검열당하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강조하며, “문화가 문화를 넘어 사회 의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문화개념을 확장하고, 대한민국 사회가 물질적 성장, 경제적 복지 단계를 지나 내적 성장과 문화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가치 체계를 제시”한다고 밝히고 있다.¹⁹⁾

예술, 체육, 관광, 콘텐츠 개발 등으로 협소화된 문화개념 및 그에 따른 정책, 좌우의 정치적·이념적 도구로 유린당한 문화·예술의 현실, 성

1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와 『별첨 - 사람이 있는 문화』 <https://www.mcst.go.kr/kor/main.jsp>(검색일: 2019. 11. 08.)를 참조하기 바람.

18) 문화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 실현을 위한 가치와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는 2017년 12월 7일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3대 가치로,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을 3대 방향으로 한 문화비전 기초를 발표하고, 이후 다양한 층위의 사람이 참여한 소통의 장 및 공문화 과정을 거쳐 9가지 정책의제와 실현을 위한 세부사업 등을 담은 문화비전을 내놓았다(<‘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 2030 발표>, 2018년 5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6696(검색일: 2019. 09. 21.).

19) 문화체육관광부, 각주 18).



<그림 2> 문화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 실현을 위한 가치와 의제 (문화비전 2030, 문화체육관광부 2018. 5)

평등의 무지가 야기한 문화(예술)적(계) 폭력, 주류와 비주류로 구분된 문화·예술(계)의 불평등 체계, 소수자를 위한 문화·예술정책의 부재, 인문학의 위기, 지역언어 및 특수언어에 대한 무관심 등을 진단·반성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서 출발하여 모든 사람으로 향하는 문화를 고민, 하의상달식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을 완성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 ▶ 문화는 개인 삶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 사회 많은 사회갈등을 치유하며 창의적인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 ▶ 예술·체육·관광·콘텐츠 등 정책의 범위를 개별화·협소화시켜 사회 현안과 미래변동의 이슈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문화정책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념적 이해관계에 종속
 - ☞ 사람 누구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문화정책의 근본적인 전환과 혁신의 에너지를 담은 장기적인 문화비전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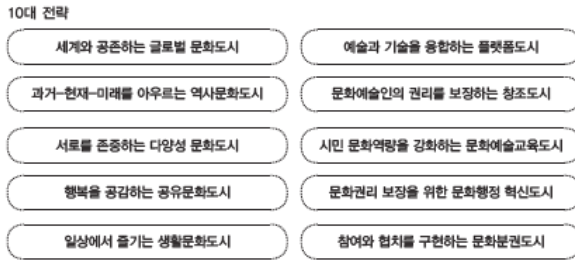
<그림 3> 기존 문화정책의 평가와 새로운 대응

돈 되는 문화를 찾기보다 문화를 통한 삶의 변화, 그 변화가 이룩할 사회를 기획한다는 것은 그간 신자유주의의 침병으로서의 역할을 도맡아 온 국민이 아닌, 자기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문화적 개인, 그러한 개인들이 자유롭게 연대하는 공동체, 즉 새로운 문화사회를 상상할 때라야 가능하다. 현 정부와 문화정책의 의제 및 그 실현을 위한 세부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모였던 8,000여 명의 시민이 그러한 상상을 했는지를 본인으로서 알 길이 없다. 그럼에도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향한 현시대적 의지의 발현이 『문화비전 2030』이라 감히 짐작해 본다. 문화는 국가의 내일을 풍요로운 문화사회로 여는 동력이다. 문화사회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통되기가 가능한 사회를 뜻한다.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정부가 문화사회를 향한 주체로 전면에서 나선다는 것은 국내 이념논쟁을 고려할 땐 매우 위험한 처사다. 더욱이 시민의 자발적 의지가 아닌 정부 주도의 문화사회는 커다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사회를 이루려는 노력과 의지가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주체에게서 발현할 수 있다는 상상은 과연 불가능한가? 이러한 상상이 위험해 보이는 까닭은 여태껏 우리가 단 한 번도 국가와의 관계에서 문화적 지배와 피지배, 억압과 착취라는 방식 말고는 경험해보지도 상상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정부와 시민의 연대로 만들어나가는 문화사회, 이 시대야말로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려는 상상과 노력이 절실한 때일 것이다. 남은 과제는 시민의 bottom-up으로 완성된 『문화비전 2030』이 각 지역으로 top-down 된 후, 그것을 지역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자기 특이성에 걸맞게 재창조하고, 다시금 bottom-up 함으로써 국내문화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데 있다.

Ⅲ. 부산문화 2030비전과 전략

『문화비전 2030』이 나온 지 14개월 후인 2019년 7월 11일 부산시는 『2030비전』을 발표했다.²⁰⁾ 부산시는 『2030비전』을 시와 부산연구원, 부산문화재단, 각계 인사, 문화·예술인(단체), 시민 등이 수십 차례의 공청회 및 공론의 과정을 거치며 탄생시킨 것으로, 시가 “기존 문화정책과 현 시정에 국한되지 않은 중장기적 비전을 담은 문화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이 주도하여 내용을 채우고, 시가 실행 여부를 검토해 완성한 부산시 최초의 상향식 문화정책비전”으로 기술하고 있다.²¹⁾



<그림 4> 『부산문화 2030』 10대 전략

『2030비전』은 ‘시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문화, 글로벌 해양문화도시’를 향후 10년간의 문화비전으로 설정하고, 부산문화가 지향해야 할 4대 가치로 ▲해양성 ▲다양성 ▲창의성 ▲혁신성을 제시, 이를 바탕으로 달성해야 할 4대 도시 목표로 ▲지역과 세계가 문화로 소통하는 해양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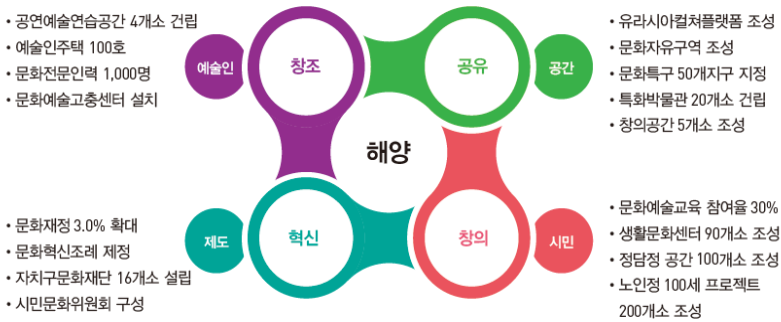
20) 온·나라 정책연구, 『부산문화 2030비전과 전략 요약본』, 2019.

[http://www.prism.go.kr/homepage/entire/retrieveEntireDetail.do?sessionid\(검색일: 2020. 7. 20.\)](http://www.prism.go.kr/homepage/entire/retrieveEntireDetail.do?sessionid(검색일: 2020. 7. 20.))을 참고하기 바람.

21) <- 문화를 품은 부산시정, 행복한 부산을 향한 첫걸음! -부산문화시정 변화의 10년, 이제 시작입니다!> 부산시청 보도자료 2019년 7월 11일자 [https://www.busan.go.kr/nbtnewsBU/1384801\(검색일: 2019. 09. 21.\)](https://www.busan.go.kr/nbtnewsBU/1384801(검색일: 2019. 09. 21.)).

화도시 ▲경계를 넘어 다양성이 넘쳐나는 포용문화도시 ▲창의력으로 미래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융합창조도시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협치도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대 전략, 27개 과제, 89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²²⁾

1. 2030의 미래상에 담긴 모순



<그림 5> 부산문화 2030의 미래상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형성하는 삶-문화가 그 도시를 만든다고 할 때, 『2030비전』은 부산사람들의 삶-문화적 권리를 위한 문화정책이라기보다 도시미학화를 위한 도시계획정책으로 읽힌다. <2030의 미래상>이 제시하는, 부산문화가 도심 속 인프라확충으로 실현되리라는 발상, 그 인프라의 활용이 곧 부산문화의 미래가 되리라는 발상은, 『2030비전』이 부산시민-삶 문화를 어떻게 발굴하고 보존하며 지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차지한 채, 시가 제공할 공간과 그 공간사용을 중심으로 생산될 상상의 문화에만 지나치게 몰두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한다. 운영주체가 시든

22) 부산시청 보도자료, 위의 자료, 2019년 7월 11일자.

개인이든 간에 부산에 살면서 부산을 대표하는 박물관 및 문화공간의 존재를 아는 이, 혹은 그곳을 찾는 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 예를 들어 최근 시와 시민의 무관심으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이주홍 문학관이나 김성중 추리 문학관은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자산임에도 그 지속가능성조차 담보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다. 이주홍 문학관이 겪는 자료 훼손이나 유실의 문제는 그것을 해결할 CCTV를 설치할 비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학관 재정의 문제보다 시민과 지자체의 문화자산 보존에 대한 무지의 심각성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태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2030비전』은 자기가 제시하는 부산문화의 4대 가치 중 다양성의 가치를 스스로 축소시키는 아이러니를 담고 있다.

또 다른 예로, 나훈아 콘서트(2019년 6월 8~9일 나훈아 청춘어게인)가 티켓 예매 3분 만에 전석 매진되고, 뮤지컬 라이온 킹(드림시어터 2019년 4월 11일~5월 26일)이 그 비싼 티켓 값에도 매회 열광하는 관객들로 채워지는 와중에 부산예술인이 여는 음악회나 무용공연은 수년째 초대장을 남발하며, 무료공연을 일상화하지만 마주하게 되는 것은 늘 텅 빈 객석뿐이다. 예술공연을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부산문화재단이 다방면으로 재정지원에 나서지만 문제는 그러한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예술공연이 부산예술인과 시민사이의 거리를 좀처럼 좁히지 못한다는 데 있다.²³⁾ <미래상>은 예술인과 시민을 분리함으로써 그들 사이의 간극을 더욱더 벌려 놓는 모순을 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2030비전』은 문화정책과 예술정책을 혼동하고 있으며 자기의 위치를 두 정책의 중간쯤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 예술은 그것의 수익성과 무관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가치를 지닌 영역이다. 그러나 예술(가)의 보호와 지원·육성을 예술정책이 아닌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피하고자 한다면 이는 반드시 예술가가 받은 손해가 시민에게 되돌아 갈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정책은 시민의 문화적 권리, 시민의 삶의 연계 속에서 고려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04 한눈에 보는 부산문화 2030 비전과 전략 추진과제 요약



<그림 6> 2030비전 추진과제 요약 (1)

해양성을 중심으로 건립·조성하겠다고 밝히는 수백 개의 공간은 서로, 또 시민의 삶과 어떤 유기적 관계를 맺는지, 그 공간들이 어떻게 부

산의 해양성으로 수렴되는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시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문화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간을 통해서 창출되는 것이 아니다. 설사 수많은 문화적 공간이 생겨난다손 치더라도 그 활용 주체가 예술가·시민·관람자로 따로 설정되어 있는 한, 그 공간들은 기존에 널려있는 비유기적 문화공간과 어떤 변별점도 갖지 못하는 유사 문화공간의 확충에 불과하다. 이는 『2030비전』이 도시정책과 문화정책을 혼합한, 아니 도시정책을 위한 문화정책이라는 모순의 리더십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가 제시하는 ‘시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문화, 글로벌 해양문화도시’라는 비전과 <미래상>의 충돌을 애써 외면하면서 말이다.

2. 최초와 최고를 향한 강박

<2030비전: 추진과제 요약>은 ‘전국 최초’, ‘최고’라는 말을 강박적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해양성/해양문화도시 - 부산만의 정체성을 가진 부산문화 정립 = ‘문화자유 구역 지정(전국 **최초**), 해양유산 발굴 체계화(전국 **최초**), 해양인문학 센터 설립(전국 **최초**) ●<다양성/포용 문화도시 - 모든 시민생활 속에 문화를 입히다> = 문화포털시스템 구축(전국 **최초**), 전국 **최고** 생활문화센터 인프라 구축 90개소. **최초·최고**, 중요하다. 그러나 『2030비전』이 목표로 하는 그 최초·최고의 인프라 구축이 타 도시와의 경쟁적 이유에서라거나, 도시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관광지로서의 부산, 타지역 사람들을 불러들일 효과라는 측면에서는 가치를 발휘할는지 모르나 정작 부산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위한 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창의성/융합창조도시 - 예술인 권리보장과 시민문화 역량 강화>는 추진과제로서 예술인복지와 전문문화인력 양성을 제시한다. 이 범주

창의성

융합창조도시

예술인 권리보장과 시민문화 역량 강화



예술과 기술의 융합 문화 플랫폼 도시

- 기술융합 플랫폼형 문화창업 지원
 - 문화 메이커스페이스 10개소
- 창의적 문화공간 조성(5개)



예술인 복지 확충

- 예술인 복지 2030 계획 수립
- 예술인 생활 안정화사업 시행
- 문화예술 고충센터 설치



문화인력 양성(30년까지 1,000명)

- 전문 창작 예술인력(300명)
- 문화 기획 인력(300명)
- 지역연계형 인력(400명)



시민문화역량 강화하는 문화예술교육도시

- 학교문화예술교육 체계화(교육청 협업)
- 문화예술교육지원 센터 강화(16개)
- 문화예술교육 단체 지원(20개)

혁신성

문화협치도시

문화권리 보장과 문화분권도시 구현



문화행정혁신도시

- 문화행정혁신조례 제정
- 부산시민 문화 현장 제정
- 문화재정 3% 확대



문화분권도시

- 부산문화재단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
- 자치구 문화재단 설립 지원(16개)
- 부산시 시민문화위원회 설치



<그림 7> 2030비전 추진과제 요약 (2)

에 해당하는 자를 예술인과 전문문화인으로 설정하고 창의력 발산과 그에 따른 수혜를 전문가로 국한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을 역차별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창의성은 누구나 지닌 역량이다. 예술은 문화지만

문화는 예술이 아니다. 그럼에도 문화가 예술을 닮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우리가 동의한다면, 아울러 예술이 창조도시로서의 부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면, 부산시는 부산문화정책의 하위범주이면서 독립적인 부산 예술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혁신성/문화협치도시 - 문화권리 보장과 문화분권도시 구현>을 위한 추진과제와도 연결되는데, 그 이유는 ‘문화분권도시를 위한 부산문화재단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에서 기인한다. 현재 부산문화재단의 역할은 대부분의 경우 예술인과 문화전문인력을 지원하는 데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 말에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겠지만, 부산문화재단이 부산예술재단으로 기능하면서 자기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부산문화재단 자신이 문화개념을 정립하지 못하고, 문화와 예술의 차이를 혼동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는 한, 문화재단의 독립은 부산문화보다 ●<창의성/융합창조도시>의 과제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서만 기능하게 된다. 문화는 없고 예술만 남는 아이러니, 시민은 없고 예술가만 남는 아이러니를 연출하면서 말이다.

부산문화재단은 왜 재단 명칭이 부산 ‘예술’재단이 아니라 부산 ‘문화’재단인가에 대한 성찰을 필요로 한다. 문화가 곧 예술이 아니라는 ‘문화적’ 시각이 이미 재단 명칭에 내포되어 있다. 부산문화재단은 ‘시민 및 시민사회 형성에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은 문화밖에 없다’는 초심을 늘 되새겨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 활동의 의미와 동력을 오로지 삶 속에 두고자 하는 문화”적 실천을 시민·시민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실행에 옮길 때라야 부산문화재단은 비로소 자기 정체성의 확립은 물론 재단독립의 의의 및 자율성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²⁴⁾

24) 이성훈, 『모더니즘에서 예술까지, 그리고 문화적폐의 척결』, 『공감 그리고』 25, 2017, 6~7쪽.

『2030비전』은 “지금 부산의 문화적 환경, 시민문화활동 기반이 열악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10년 뒤 부산 문화를 다시 그리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 실행을 위한 추진과제는 예술가와 문화실천가의 권리는 강화하면서 시민의 문화적 권리는 약화시키는 역설을 담고 있다. 아마도 •<다양성/포용문화도시 - 모든 시민생활 속에 문화를 입히다>의 추진과제를 통해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의 문화적 권리란 문화정책 설계를 위한 토대’이지 추진과제로 범주화할 사안이 아니다. 『2030비전』의 오류는 바로 그 토대 설정에 있다.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문화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기켜낸 시민의 권리로서의 도시를 오히려 문화정책의 토대로 삼았다는 과오가 있으며, 이는 곧 시민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전도시켜 도시의 권리는 강화하고, 시민을 도시를 위한 존재로 강등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도시는 시민이 가꾸어 만들어 나가는 사회적 공간이지 시민이 예측되는 선형적 공간이 아니다. 이로써 『2030비전』은 도시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설계된 문화정책이란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본 연구자는 앞서 문화정책은 국가를 넘어 문화사회로 나아가는 핵심이란 주장을 펼쳤다. 이 주장이 유효하다면 『2030비전』은 시민사회, 곧 문화사회를 여는 정책이어야 마땅함에도 도시미학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 까닭은 자명해 보인다. 첫째, 문화사회를 향해 나아가도 모자랄 판국에 문화를 도시미학화를 위한 수단으로, 부산문화정책을 부산도시정책의 도구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부산시민의 삶을 위한 가장 긴

부산문화 2030 비전과 전략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21세기 도시발전의 핵심은 문화입니다.
문화로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 부산문화를 다시 그려봅니다.

급한 정책 영역이자 부산시정의 기본원리까지 포괄하는 시의 명운이 걸린 사안으로서의 부산문화정책은 간데없고 사람보다 도시를 우위에 두는 역설적 문화정책이 탄생한 것이다. 둘째, 민간 주도라는 말에 방점을 찍으며 『2030비전』을 시민의 요구를 수렴한 민주적 문화정책으로 강조하지만, 문화와 예술의 차이에 대한 몰이해는 물론 그것의 개념조차 바로 세우지 않은 채 도시를 채워 널 문화·예술을 민간에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2030비전』이 인프라의 확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다. 지자체는 문화정책의 설계에 앞서 시민과 함께 문화·예술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심도 깊게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어야 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쳤더라면 『2030비전』이 문화정책과 도시정책이 뒤엉킨, 문화정책과 예술정책이 뒤엉킨, 시민보다 도시를, 시민보다 예술가를 향한 정책으로 변질되진 않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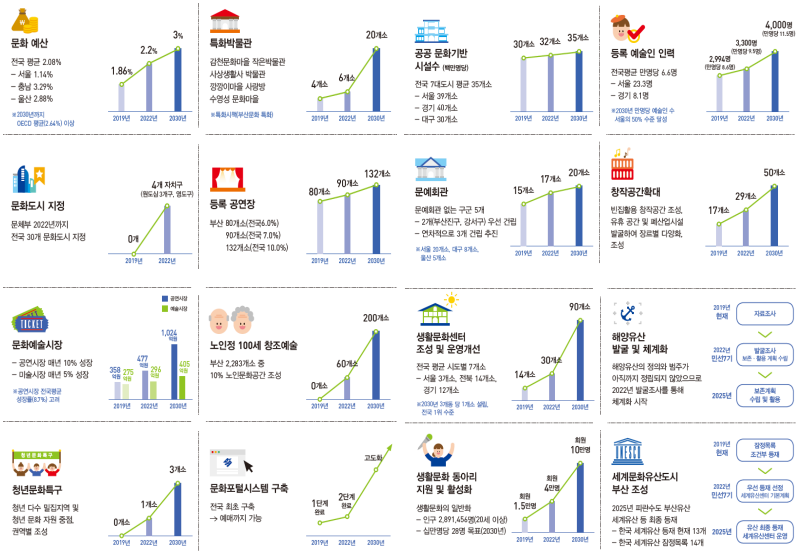
3. 인프라가 문화가 되는 아이러니

문화를 도시만들기의 소재로 다루는 한, 도시는 문화도시의 외양을 띠 뿐이다. 문화에 대한 몰이해는 반드시 비문화, 반문화를 양산한다. 스펙터클한 도시부산을 위해 『2030비전』이 중층적·복합적 층위의 부산성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해양성, 다양성, 창의성, 혁신성을 4대 가치로 설정하고, 인프라확충을 통한 미래 문화지표에 집착하는 것은 지역으로서의 부산만이 지녀 왔거나, 지녀 갈 독특한 부산문화보다 새로이

과제 08 시민 문화권리보장을 위한 '일상문화활동 지원 강화'

① 생활문화 동아리 지원 및 활성화	회원 4만 명	6만 명	10만명
② 관객문화운동 확산	1개 장르	3개 장르	5개 장르
③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 강화	3년 단위 실태조사	지원 확대	지원 확대
④ 경제적 취약계층의 문화활동 지원 강화	14만여 명 지원	15만여 명 지원	16만여 명 지원
⑤ 시민 문화 활동의 체계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3년 단위	계획추진	계획추진

<그림 9> 2030비전 실천 로드맵 중 과제 8



<그림 10> 2030 문화지표

구축할 인프라와 그 인프라를 통해 생산될 새로운 문화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는, 다시 말해 막대한 혈세의 투입을 통한 문화시설의 건립과 그 시설의 활용을 부산문화로 귀결하는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한계는 『2030비전』이 제시하는 「10대전략 27개 과제 실천 로드맵」(이하 「실천 로드맵」)과 「2030 문화지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²⁵⁾

문화인프라의 확충은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문화정책은 문화에 대한 철학적 사유와 문화적 권리에 대한 비판적 사유에서 출발하여, 문화사회로 나아갈 실천으로써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2030비전』은 문화적 권리를 <포용문화도시 과제 8>, “일상문화활동 (세부과제: 생활문화동아리, 관객문화, 장애인, 경제적 취약계층)지원” 개념으로 축소하여,

25) 은나라 정책연구, 앞의 자료, 2018~2019, 18~19쪽 참고하기 바람.

모든 시민의 권리로서의 문화, 문화사회를 향한 핵심으로서의 그 권리를 문화인프라의 하위 범주에 놓고 있다.²⁶⁾ 이는 부산시의 문화개념 및 문화정책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목격하게 한다. 스펙터클로서의 부산을 구현할 인프라와, 그 인프라를 채울 새로운 상품으로서의 문화를 발굴·생산·배치하려는 전략, 즉 미래도시부산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상품생산에 박차를 가하도록 이끄는 로드맵이 바로 『2030비전』인 것이다.

『2030비전』의 「실천 로드맵」은 부산시가 규정하는 역사성을 띤 장소, 경관(바다)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장소에 몰두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그 기준 밖으로 밀려난 다양한 장소와 그곳 주민의 다양한 삶 모두를 동시에 소외시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역사와 바다 경관을 활용한 문화사업과 랜드마크만큼 부산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생활문화도 가치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다층적 부산문화의 가치를 축소하고 있다. 문화예술생산(자)을 두고 진행되는 ‘융합’이라는 현시대적 요청에 대한 이해 부재는 전문/비전문(가)의 근대적 구분에 따른 인력양성 및 프로그램, 인프라 구축의 한계로 이어지고 있다. 기존 문화시설의 활용 문제가 산재함에도 그것의 활용과 관련한 기획, 매개인력,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기보다 새로운 공간창출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건립강박처럼 보인다. 새로운 공간창출을 계획한다면 반드시 어떤 제도를 통해 어떤 인력을 양성하고,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이 다채로운 Infra는 누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
 ⇨ 시민의 부재



<그림 11> 사람 vs. 인프라

26) <그림 7>, <그림 8> 추진과제 요약과 「부산문화 2030비전과 전략 요약본」 중 「10대 전략 27개 과제 실천 로드맵」 참고 바람.

출발해야 마땅할 것이다.

『2030비전』은 2030년의 문화지표를 제시(<그림 10>)하며 10년 뒤 시민과 예술인의 삶이 변화할 것이라는 약속을 한다. 그러나 따로 설정된 민선7기 핵심 추진사항 10개(<그림 12>)에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것의 유기적 관계는 또 무엇인지 발견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만만치

“ 민선 7기에는 2030 문화비전의 실행 기반을 공고히 구축하여 『부산문화 2030 비전과 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림 12> 민선7기 핵심 추진사항

않아 보이는 10개의 과제를 2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가 하는 의문마저 든다. 2022년 이후로 설정된 문화지표는 10년 후 부산이 전국 최대의 문화도시로 거듭날 것만 같은 환상을 불러 일으킨다. 그러나 『2030비전』이 민선8기로 이어진다는 전제뿐 아니라 예산의 집행, 인력양성과 배치 등의 문제가 모두 이루어진다고 전제할 때라야만 가능할 텐데, 이러한 문제를 놓고 본다면 『2030비전』의 영속성이 담보될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문화지표가 부산성을 전혀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다. 백화점의 화려한 진열장을 연상케 하는 『2030비전』은 동네 슈퍼의 초라함을 극대화하면서 현재 부산과 부산문화가 리모델링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내림으로써 부산성을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 역설을 드러낸다. 지역문화에 대한 고민과 성찰 없이,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문화사회에 대한 고민 없이 설정된 문화정책은 결국 문화는 없고 도시 미관만 꾸미는 사업으로 전락할 뿐이다.

비록 『2030비전』이 부산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고심하여 만든 정책이라고는 하나, 시민의 요구를 듣고 수용하기 이전에, 시민들과 함께 문화는 무엇이고, 부산문화는 무엇인지, 또 지역으로서 부산은 무엇이고, 지역으로서 부산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최초의 고민을 했어야 마땅하다. 비록 그러한 과정이 지난하여 화려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상품목록을 구성하듯 내어 놓는 문화정책보다 부산의 참모습을 담아내려는 소박한 문화정책을 내어 놓는 것이 지금의 부산과 부산시민에겐 더 필요하다. 부산시민은 중앙 혹은 타도시와 비교하여 더 많은 인프라가 부산에 생겨나기를 갈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프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산성과 부산시민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부산시민으로서의 문화적 권리를 지키고 키워나가는 것이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문화정책이 요구되며, 그러한 정책적 실천으로 중앙 혹은 타

지역과 비교되지 않는 지역으로서의 부산, 모방 불가능한 독특한 정체성을 지닌 부산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모든 도시를 동일하게 만드는 문화인프라의 확충보다 부산만의 특이성을 지키고, 키워내는 문화정책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가? 부산의 문화는 다양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빛을 발하지 못한 채 한편으로 밀려나고 있는 수많은 문화가 있다. 그러한 문화를 발굴하고 그것의 가치를 되찾는 노력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실천을 몇몇 사람(기득권)에게 맡기거나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지자체와 부산시민은 부산과 부산문화를 두고 지난한 고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인프라를 넘어 진정한 삶-문화, 문화사회를 만들려는 고민과 노력이 부산을 더욱더 풍요로운 문화사회로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4. 10년간의 습

『2030비전』이 거대 도시화를 향한 기획으로 나아가는 까닭은 지역분권, 지방자치라는 희망의 메시지에 담겨있는 경제적 자생에 대한 두려움 탓일지도 모른다. 경제적 자생이란 결국 부산시 보유자금과 직결되는 문제다. 시의 살림을 도맡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보자면 투자와 수익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수량화 불가능한 사회적 가치보다 수량화 가능한 경제적 가치와 그것이 불러올 효과에 주목하는 것이 어찌면 타당할 것이다. 더욱이 전시행정과 기념비주의에 매료되고 길든 시정부가 자기 실적으로 환산하기 힘든 사회적 가치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것은 어리석음을 자처하는 행위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늘 그렇듯 선거에서 민심의 향방은 비가시적 성과가 아닌 가시적 성과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물적으로 확보된 인프라들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투자한 자금을 넘어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 그 이익이 부산을 경제적인

로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하는 한, 문화인프라 확충을 향한 부산시와 부산시민의 욕망을 막을 길은 없어 보인다. ‘품격 있는 창조경제 도시부산’을 위한 『2030비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스펙터클-부산이 아닌 시민사회-부산을 여는 과정으로서의 부산문화정책 생산에 천착할 시간은 아직 오지 않은 듯하다. 그럼에도 『2030비전』이 『창의한국』과 『문화비전 2030』이 지향하는 문화=사람=삶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고민하고, 문화=도시=자본에 매몰된 자기를 반성함으로써 지금의 한계를 극복하길 바란다.

본 연구자는 현 정부에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 연구를 통해 주목하려는 것은 과거 대부분의 정부가 국가자본주의를 강화하고 신자유주의를 가속화하는 정책입안 및 시행에 몰두했던 데 반해 현 정부는 되레 그것들의 ‘약화’와 ‘감속’을 고민하고 그 고민을 정책입안 및 시행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려 한다는 것이다. 돈에 혈안이 된 채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괴물 아닌 괴물로 변해가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함께 사는 세상임을 자각할 수 있는 순간, 사람을 위한 ‘틈’이 열리는 순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순간’ 만큼은 남겨두는 정책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창의한국』의 정신을 잇는 『문화비전 2030』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문화비전 2030』의 입안주체가 국가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에 아랑곳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이 틈과 순간을 마련코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까닭이다. 왜냐하면 그 틈과 순간이야말로 국가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에 균열을 일으키며 뚫고 나올 역능들이 응집하는 처소이기 때문이다. 문화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쓰이느냐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내일은 달라질 것이다. 극단적 신자유주의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풍요로운 문화사회로 나아가갈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런 이유로 『2030비전』이 문화의 힘을 ‘틈과 순간’을 마련하는 데 쓰는 해

안을 담길 바란다. 아마도 이런 바람의 어리석음은 돈 따위에 아랑곳하지 않는 자유롭고 숭고한 영혼 같은 부산문화정책을 꿈꾼다는 데 있을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infra 비전을 넘어 문화적 시민사회 비전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에 이른 문화부터 접변과 변동의 과정을 거쳐 생겨났을 혼종적 문화까지, 부산엔 다양한 문화가 있고, 그것이 타지역과 차이를 보이는 무엇이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부산문화라 부를 것이다. 한편 지역이라는 것이 국가의 중심에서 제외된, 서울 이외의 곳들을 호출하는 것이라 할 때 부산문화는 중앙에서 타자화된 지역의 문화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아이러니는 이것이 때로는 특이성을 담보하는, 때로는 열등감을 강제하는 호명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부산사람이 지역문화로의 호명을 기꺼이 자기화한다는 데, 다시 말해 부산사람이 그 호명에 무비판적이고 심지어 그것을 내면화한다는 데 있다. 이는 타자로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중앙을 향한 욕망과 그것에서 비롯하는 열등감 사이에서 내 것의 가치는 망각하고 방기하는 현상으로 드러난다. 중앙을 향한 욕망과 중앙에 대한 열등감은 부산사람이 부산사람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심리적 기제로 작동한다. 왜냐하면 국가의 국민으로 남는 것만으로도 자기 출신을 부정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정당성과 안도감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부산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으면 충분하듯이 부산도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하면 그만이다. 부산사람도 부산도 사라지면 그뿐이다. 국가와 국민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지역문화정책은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의 풍요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국가문화정책의 하위 범주로 존재하면 된다. 그러나 지역문화정책이 지역과 지역민의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역문화정책은 반드시 지역민과 지역에 대한 근원적 고민에서 출발해야 마땅하다. 왜 지역민이 자기 정체성을 버리는 것에 그토록 무감각한지, 왜 지역민이 중앙에 대한 욕망과 열등감으로 자기 지역문화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지, 왜 지역민들은 이것을 해소할 방법으로 거대한 문화적 인프라를 요구하는지에 대해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지자체가 중앙을 욕망하고 중앙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것은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지역과 지역민을 부정하면서, 한 국가의 빛나는 지역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지역 문화정책을 앞세워 여러 층위와 차원의 이데올로기적 실천을 강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에 걸맞은 매끈한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질적 요소는 제거하고 이미 보편적인 것으로 되어 버린 중앙의 문화적 방식에 따르기, 이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앙의 문화가 지역적 차이가 거세된 지역문화를 대체하는 일에 지역이 자기 문화정책을 앞세워 강행할 지도, 심지어 자기 특이성을 상납하며 중앙의 문화발전에 기여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국가를 넘어, 문화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문화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당위라고 한다면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문화적 사회와 시민, 즉 **문화적 시민사회**를 그려내는 상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문화정책의 역할은 지역-사회와 지역-시민의 존립을 위한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문화적 토대란 교환가치로서 작용할 문화적 인프라의 구축이 아닌 사용가치를 발휘할 문화와 그 문화생산을 위한 시민-주체를 뜻한다. 아울러 이를 가능케 할 조건으로서 시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자유시간과 비용 또한 포함한다. 문화는 그것을

향유할 주체의 가치 추구하고 함께 성장하며, 그것을 향유할 주체의 자유와 함께 풍요로워지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노동시간의 문제, 최저 임금의 문제, 기본소득의 문제 등이 지역문화정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음을 뜻한다. 지역문화정책은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할 때 비로소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위해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문화정책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실질적 자유가 향상되는 과정’을, 그리고 ‘내일의 문화적 시민사회를 여는 원리’를 담아야 한다. 이로써 지역문화정책은 시민의 문화적 권리에 근거한 문화사회, 풍요로운 문화적 시민사회를 여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

어쩌면 부산성은 타자성과 동의어인지도 모른다. 중앙의 문화에 편승하지 않는, 중앙이 유포하는 문화적 가치에 매몰되지 않는 타자로서의 부산을 존중하는 것이 오히려 부산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닐까? 문화적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타자로, 부산시민으로 멋지게 살기. 이 길을 함께 할, 동반자로서의 부산문화정책을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1. 저서 및 논문

- 강내희, 『코뮌주의와 문화사회』, 『문화과학』 50, 2007.
 김재기 외, 『지역문화어댑터 양성 프로그램 개발 제안』, 부산발전연구원, 2016.
 김정수, 『‘문화융성’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가정책연구』 30-3, 2016.
 김평수, 『MB 정부의 문화정책 평가와 박근혜 정부의 정책 과제』, 『글로벌창의문화연구』 2, 2013.
 노명우, 『문화현장 제정과 문화정책의 과제』, 『문화과학』 46, 2006.
 데이비드 트로스비, 성제환 옮김, 『문화경제학』, 한울, 2004.
 원도연, 『이명박 정부 이후 문화정책의 변화와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연구 - 이명박

- 정부의 문화정책 평가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32, 2014.
- 이동연, 『대안적 문화정책의 구상-새로운 패러다임은 가능한가』, 『문화연대 문화 정책포럼 자료집』, 2012.
- 이성훈, 『모더니즘에서 생활예술까지, 그리고 문화적폐의 척결』, 『공감 그리고』 25, 2017.
- 조정환, 『인지자본주의』, 갈무리, 2011.
- 황설화, 『김영삼 정부 이후 한국의 문화정책이념에 관한 연구: 문화적 민주주의인가, 문화의 민주화인가?』, 『한국정책연구』 19-1, 2019.

2. 인터넷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
<https://www.mcst.go.kr/kor/main.jsp>(검색일: 2019. 11. 08.).
- 문화체육관광부, 『별첨 - 사람이 있는 문화』, <https://www.mcst.go.kr/kor/main.jsp>
(검색일: 2019. 11. 08.).
- 문화체육관광부, 『새예술정책』,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6696
(검색일: 2019. 09. 21.).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 업무보고>
<https://www.mcst.go.kr/kor/main.jsp>(검색일: 2019. 11. 08.).
- 문화체육관광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 2030 발표>, 2018년 5월 16일 문화
체육관광부 보도자료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6696(검색일: 2019. 9. 21.).
- 온-나라 정책연구, 『부산문화 2030비전과 전략 요약본』,
<http://www.prism.go.kr/homepage/entire/retrieveEntireDetail.do?jsessionId>
(검색일: 2020. 7. 20.).
- 부산시청, <- 문화를 품은 부산시정, 행복한 부산을 향한 첫걸음! -부산문화시정 변
화의 10년, 이제 시작입니다!> 부산시청 보도자료 2019년 7월 11일자
<https://www.busan.go.kr/nbtnewsBU/1384801>(검색일: 2019. 09. 21.).
- <“마르크스가 말한 새 사회는 오지 않았다”, 길목협동조합 율레 강좌, 김수행 교수의
‘자본주의가 잉태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
<http://www.ecumen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9878>(검색일:
2019. 09. 08.).

<노동거부와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 <https://vimeo.com/157978479>(검색일: 2019. 09. 08.).

투고일 : 2019. 11. 10. 심사완료일 : 2019. 12. 06. 게재확정일 : 2019. 12. 17.
--

| Abstract |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Busan Culture 2030 Vision and Strategy-From Vision of Infrastructures to That of Cultural Civil Societies-

Jung, Doo-Soon

Analyzing *Busan Culture 2030 Vision and Strategy*, the paper aims to draw out its limitations and possibilities, and to suggest basic principles that the cultural policy of Busan should contain. To this end, this work first examines the cultural concepts and policies of each government, from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o the current Moon Jae-in administration. This helps to find possible solutions to the following fundamental questions: ‘what concept of culture does *Busan Culture 2030 Vision and Strategy* as a local cultural policy rest on, and how does it picture the future of Busan?’ Born between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fascinated by urbanism, exhibition administration and monumentalism, and Busan citizens recognizing the expansion of infrastructure as a culture, *Busan Culture 2030 Vision and Strategy* has, in fact, limitations as a peculiar mixture of cultural and artistic policies, and urban and cultural policies. Disregarding Busan’s localities, or Busanness so to speak, *Busan Culture 2030 vision and strategy*, which explicitly expresses its dream of Busan as a spectacular marine giant, contains the city’s aestheticized future in which there are not Busan citizens but only artists and a marine city.

Based on this critical analysis, the study argues that the role of local cultural policy lies in establishing a cultural foundation for the survival of

local communities and local citizens, and that the cultural foundation is not the construction of cultural infrastructure to act as exchange value, but rather in a culture that will exercise use value and form a civic entity for the production of culture. In addition, it suggests that local cultural policies should go beyond the urge of revitalizing local arts and constructing cultural infrastructure to diagnose and consider real issues such as working hours, minimum wage, and basic income with which Busan citizens are confronted, and thus those which become the driving force for tomorrow's cultural civil society.

Keywords: Busan, Busan Culture, Busanness, Cultural Policy, Citizen, Cultural Civil Society

